

 POSRI 보고서

국내 상륙한 피케티 열풍과 한국 소득불평등의 현주소

김지선 수석연구원, 경영연구센터 (jisunkim@posri.re.kr)

곽강수 센터장, 경영연구센터 (gskwak@posri.re.kr)

[목 차]

1. ‘피케티 열풍’ 국내 상륙
2.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현주소
3. 불평등 문제 해결, 왜 중요한가?
4. 예상 정책 방향
5.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전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한글판 출간과 저자의 내한으로 국내에도 피케티 열풍 상륙
 - 피케티는 많은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 ‘경제성장률(g)’을 상회하는 ‘자본수익률(r)’을 지적
 - 지난 9월 19일 열린 토론회에서 피케티는 소득불평등이 어느 정도까지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극심한 불평등은 성장을 저해한다고 강조
-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청년실업,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불평등에 대한 논의 증가
 -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점유율은 약 45%로 OECD 국가들 중 높은 수준. 또한 중산층 비중은 하락, 가계와 기업 간 소득격차는 확대 추세
- 소득불균형은 성장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갈등을 야기시키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극심한 소득격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 소득불평등 심화→사회정치적 불안정 증대→투자 위축→성장 둔화→불평등 심화의 악순환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
 - 불평등 문제는 다음 세대로 연장되어 사회적 지위 상승과 삶의 질 개선 기회를 저하시켜 장시간에 걸쳐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 소득불평등이 국제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국제기구 등은 ‘성장’ 중심의 논의에서 탈피,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 강조
- 국내외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정책 화두로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 추진 중
 - 우선 정부는 내수확대를 위해 기업소득을 가계소득 증대로 연결하는 내용의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세법 개정안 발표 (‘14.8월)
 - 또한 재정확보를 위한 증세, 일자리 확충, 의료혜택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정책 도입을 추진 중
- 세수부족과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또한 더욱 거세질 전망
 -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경영 및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 확대 필요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 니즈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의 전략적 접근 필요

1. '피케티 열풍' 국내 상륙

□ 전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 (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 한글 번역본 출간으로 국내에서도 소득불평등 논의가 뜨거워지는 양상

○ 피케티는 지난 3세기에 걸친 20개국의 경제 및 자본집적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많은 국가들에서 소득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결론

- 소득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성장률(g)'을 상회하는 '자본수익률(r)'을 꼽았음. 특히 1980년대 이후 新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상위층에 대한 감세정책 등이 소득불평등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

- 피케티는 세습 자본의 권력 확대를 막고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자산규모별로 최대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글로벌 부유세' 등 자본과세 도입 제안

○ 피케티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많으나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소득불평등 논의를 전세계로 확산시키는 계기 마련

-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데이터 오류와 그에 따른 결론의 왜곡, 부유세 등의 급진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비판과 반론 제기

-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과 주요 언론들은 '일부 통계적 오류가 책의 결론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며 피케티를 옹호

□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대토론회 1% vs. 99 %' 에서 피케티는 극심한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누진세 등을 통한 부의 이동성 제고 강조

○ 피케티는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극심한 불평등은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

- 자본수익률(r)과 경제성장률(g)의 차이가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유일한 것은 아니며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등 다른 요인도 중요하다고 언급

○ 누진세 등의 도입으로 부의 이동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

- 한국의 높은 사교육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공교육 투자 강화 제안

□ 이번 피케티 저서의 한글 번역본 출간과 내한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학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불평등 문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 진행

○ 소득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방안 마련 논의와 관련 정책 도입 추진 전망

< '대토론회 1% vs. 99%: 피케티와의 대화' 현장스케치 >



사진출처: 연합뉴스

- 오는 10월 열리는 '세계지식포럼 (World Knowledge Forum)'의 사전행사로 지난 9월 19일 피케티 교수 초청 '대토론회 1% vs. 99% : 피케티와의 대화'가 신라호텔에서 열림
-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권 및 재계의 저명인사들과 학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 남경필 경기도지사,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경식 CJ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참석
- 이번 토론회는 피케티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로렌스 코틀리코프 보스턴대 교수가 피케티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쳤음. 조원동 중앙대 교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가 패널토론자로 참석, 피케티 연구와 한국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토론을 벌임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극심한 불평등은 성장을 저해한다"

"누진적 과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육에 대한 투자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의 차이는 부의 불평등과는 상관이 없다. 자본수익보다는 임금 격차가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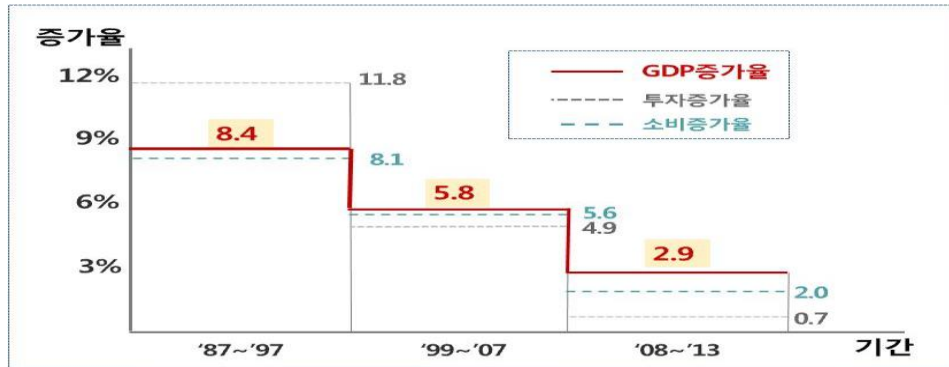
"미국의 사회보험, 연금 등을 고려한다면 미국 사회의 불평등은 피케티 주장보다 심하지 않다."

- 한국의 소득불평등 문제와 관련 토론자 모두 한국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를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이견
 - 조원동 교수와 신관호 교수는 피케티의 주장은 한국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자본수익률(r)을 낮추는 과세보다는 경제성장률(g)을 올려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강조
 - 유종일 교수는 한국은 고령화 등 조기 노화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하며 피케티의 주장이 우리에도 의미가 있다고 언급

2.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현주소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청년실업,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불평등과 재분배 논의 부상
- GDP 성장률의 경우 평균 8.4%('87~'97)에서 2.9%('08~'13)으로 하향세이며 투자, 소비,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도 하락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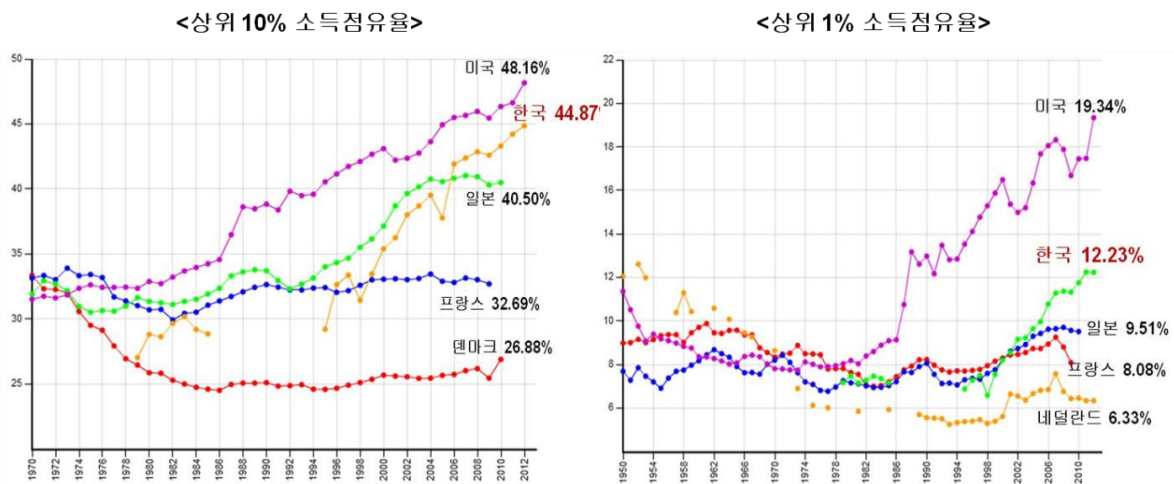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기간 평균)>



자료: 홍장표 (2014) 포스리 재정리

-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점유율은 44.9%로 OECD 19개국 중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고 상위 1%의 경우 12.2%로 미국, 영국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
- 지난 70년부터의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상위계층 소득점유율은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

<상위 계층 소득점유율 추이 (1970~2012)>¹



자료: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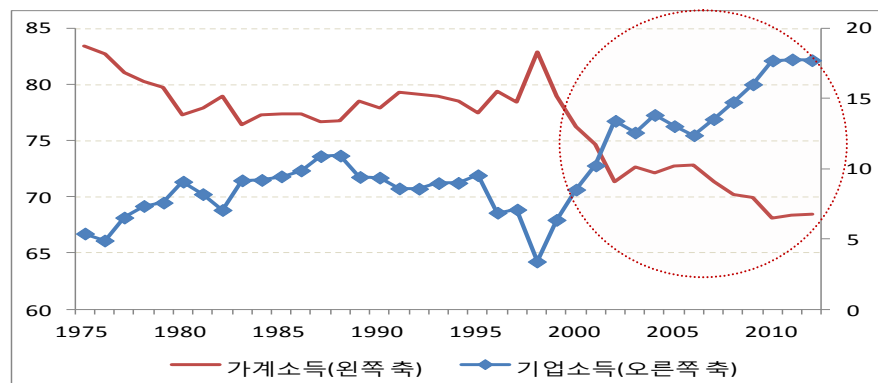
¹ 전세계 국가 소득통계 (조세 통계 활용)를 집계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경제대인 세계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 자료 분석내용. 한국 데이터의 경우 김낙년, 김종일 교수 논문 포함 통계가 공식 등록

- 소득불평등 확대로 중산층 비중이 75.4%(’90) → 67.5%(’10)로 감소. 또한 OECD 평균 대비 임금격차 및 저임금 근로자 비중 높은 편²
- 이러한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서는 비정규직 증가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실질임금 증가율 둔화를 들 수 있음
- 실질임금 상승률의 경우 4.4%(’01~’05) → 1.7%(’06~’10) → 0.3%(’11~’13)로 하락 추세³

□ 또한 가계와 기업 간 소득 격차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로 OECD 국가 평균 대비 격차가 큰 편

- 가계소득 비중은 약 84% (’75)에서 2000년대 들어 급속히 하락하여 현재는 70% 이하.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총소득에서의 가계부문 감소와 기업부문 증가는 OECD 국가의 공통적인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변화속도는 OECD 평균 대비 빠른 편⁴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 추이 (%)>



- 주) (1) 기업소득 = 일반기업소득 + 금융기업 소득
(2) 가계소득 = 피용자보수 + 가계부문 영업잉여 + 재산소득

자료: 홍장표 (2014)

□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조세체계를 통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 빈곤율은 세전에는 OECD 27개국 평균 대비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세후빈곤율은 OECD 평균 대비 높음 (빈곤율 상위 4위)⁵
- 이는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등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평가

²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2014) 참고

³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4) 참고

⁴ 국회예산정책처 (2014) 참고

⁵ 빈곤율: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가구 소득의 절반 이하인 빈곤층 인구 비중

<세전빈곤율과 세후빈곤율 비교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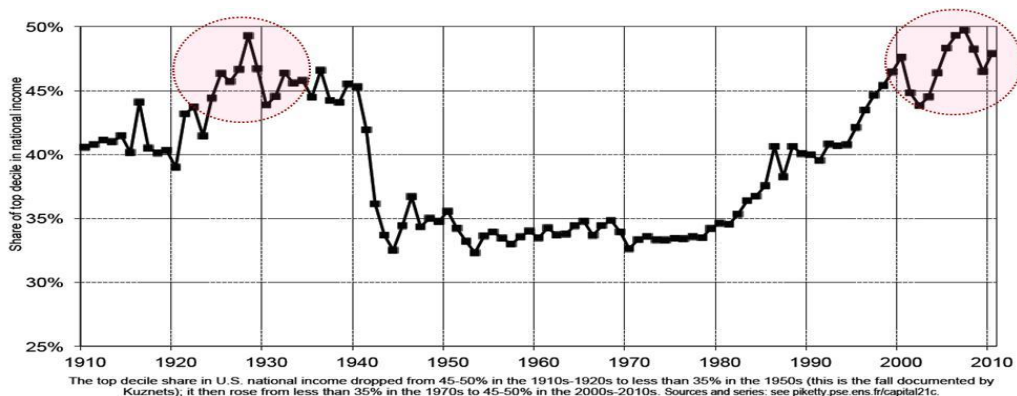


자료: 서울신문 (OECD /국회예산정책처 인용) 포스리 재정리

3. 불평등 문제 해결, 왜 중요한가?

- 소득불균형이 소득 증가를 위한 유인 제공 등 경제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바는 있으나 극심한 소득 격차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 IMF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득불평등 심화가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을 저해한다고 분석
- 또한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사회문제를 넘어 경제위기와 경기침체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대공황이 발생되기 직전과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불평등이 대폭적으로 심화
 - 신용평가회사인 S&P는 미국 소득불평등이 인구 대다수를 경제성장의 이득에서 배제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
 - 컬럼비아대 스티글리츠(Stiglitz) 교수는 소득불평등이 2008년 금융위기의 주원인이며 중산층 약화에 따른 소비감소로 경제회복 저해 주장

<미국 상위 10% 소득 비중 (1910-2010)>



자료: 피케티 웹사이트 (<http://piketty.pse.ens.fr/files/capital21c/en/Piketty2014FiguresTablesLinks.pdf>)

□ 소득불평등 심화 → 사회 · 정치적 불안정 증대 → 투자 위축 → 성장 둔화 → 일자리 감소 등 불평등 심화의 악순환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

- 불평등 문제의 심화는 중산층 약화, 실업률 증가 등 사회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켜 갈등 야기

-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2011년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운동 역시 소득불평등 문제에서 비롯

- 또한 불평등 문제는 다음 세대로 연장되어 사회적 지위 상승과 삶의 질 개선 기회를 저하시켜 장기간에 걸쳐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 소득불평등이 국제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수준에 다다랐다는 인식 하에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성장 중심 논의에서 탈피, 재분배 등을 통한 불평등 완화 강조

-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기존의 긴축재정, 작은정부 등 경제성장 중시 논조를 탈피, 재분배 정책을 통한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 강조

-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과세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재분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라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

- 세계경제포럼 (WEF, 일명 다보스포럼)은 향후 10 년 동안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주요 글로벌 리스크 중 하나로 심각한 소득격차를 지목



“소득불평등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소득불평등 해결은 IMF의 과제 중 하나다”(라가르드 IMF 총재)

“소득불평등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도전...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불평등 해소에 두겠다”(오바마 美 대통령 2014 연두교서)



□ 소득불평등 완화는 사회와 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며 중산층 확대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낮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은(높은)점을 감안할 때 소득불평등이 완화될 경우 안정적인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도 소득 상위 계층의 비중이 줄고 중산층 비중이 높았던 2차 세계 대전 이후 70년대까지 경제성장의 황금기로 평가받고 있음

4. 예상 정책 방향

□ 「21세기 자본」에 대한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과 관련 정책 도입이 국내외적으로 확대될 전망

○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부유층 감세, 금융규제 완화 등이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정책 논의 활발

- 신용평가회사인 S&P는 미국의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교육 격차를 지목하고 교육, 보건,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소득 격차 해소를 제안

- 민주당에서는 소득불평등을 2014년 핵심이슈로 선정하였으며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우리나라도 소득불평등이 정책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 등을 위한 조세제도 재편 및 다양한 정책 추진 예상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내수기반을 확충하려면 불평등의 정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

- 특히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하면 저소득층 학습기회가 사라져 인적자원 양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

○ IMF 등 국제기구들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산세, 누진세 등 과세 정책은 물론 교육, 의료보험 확대, 금융접근성 제고 등을 제안

- 또한 정규/비정규직(전체 고용의 1/3 차지)으로 분할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 제안

*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GDP의 약 9% (OECD 평균 20%)

□ 지난 8월 정부는 내수증대를 위해 기업소득을 가계소득 증대로 연결 시키기 위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세법개정안 발표

○ 직접적인 소득재분배보다는 조세제도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가 목적

○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의 세가지 내용을 포함

-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은 부분만큼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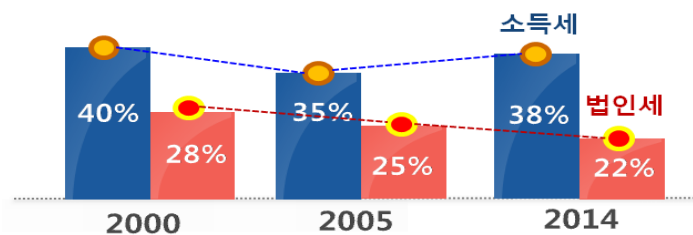
[참고]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주요 내용

- <기업소득 환류세제>: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기준미달액)한 경우 추가 과세 (단일세율 10%)
- <근로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임금 상승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 (대기업 5%) 세액공제 신설
- <배당소득 증대세제>: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 (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또한 소비확대와 재정충당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증세 추진 시 개인보다는 법인세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

-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5.9%로 OECD 34개 회원국들 중 4번째로 낮은 수준 (OECD 평균 34.1%)⁶
 -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국회세미나에서 “현재의 낮은 조세부담률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
-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확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까지 하락. 반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
 - 가계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우리나라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변화 추이>



자료: OECD Tax Database 포스리 재정리

- 또한 현정부는 복지재원의 확충을 위해 담뱃값, 지방세 등의 인상을 추진 중이나 서민부담 가중 우려로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여론 증가
 -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하였으나 낮은 복지지출 수준 향상 및 노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지원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한 상황

□ 이밖에 저소득층 의료혜택 확대, 노인·청년·여성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자립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정책 도입 추진 중⁷

⁶ 조세부담률: [조세 (국세+지방세)/명목 GDP] *100

⁷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2018년까지의 복지정책 과제를 종합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의결

5.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재계에서는 법인세 인상, 자본에 대한 과세 등 급진적인 정책 추진 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전망
 - 재계는 피케티가 제안한 고율의 누진소득세와 자본세는 기업가의 투자환경을 저해하여 고용과 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
 - 자본투자는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임금상승을 촉발하는 효과가 있으며 누진과세보다는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 하지만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업 관련 세금감면 혜택 축소, 법인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업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전망
 - 지난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부족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각종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 여론 확산
 - 전문가들은 소득재분배 효과와 세수규모가 큰 법인세, 소득세 중심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
- 또한 앞으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도 더욱 증가될 전망
 - 특히 제한된 재정 하에서 정부가 복지 확대 노력을 단독으로 추진 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 가증
 - 정부의 예산규모는 약 343조원('13년 기준)인 반면 국내 기업의 총 매출액은 약 3,450 조원('12년 기준)으로 약 10 배 규모
 - 기업은 사업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적 이윤 제고를 모색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경영 및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 확대 필요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 니즈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의 전략적 접근 필요

[참고자료]

[도서자료]

Thomas Piketty,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March 2014

[공개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Fiscal Policy and Income Inequality' Policy Paper, 2014.01.23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2014' 2014.06.17

World Economic Forum (WEF), 'Global Risks 2014', 2014. 01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동향 & 이슈 (2014 7/8월호), 2014.08.29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자료,' 2014.08.06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KB 지식비타민: 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이와 금융포용,' 2014.08.18

[학술자료]

홍장표, '소득 주도 성장전략의 정책과제' (2014년도 한국사회경제학회 여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中), 2014

[언론자료]

Wall Street Journal Korea, "S&P, 소득불평등이 미국 경제성장 저해," 2014.08.08

서울신문, "한, 조세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OECD 꼴찌" 2014.08.08

연합뉴스, "재계의 '피케티 때리기'... "한국에 맞지않는 주장"" 2014.09.16